“GGM 해결”…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위 본격 가동

첫 회의서 운영방향 확정…전원합의체로 상생·협력방안 마련
주1회 이상 회의…24일부터 GGM 근로자·경영자 등 의견 청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정·중재특위 구성을 마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으며, 오는 24일부터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특위는 GGM 관련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노사민정 현안을 조정·중재하고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우선 조정·중재 방향으로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고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GGM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GGM 당사자 간 공감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GGM 근로자 및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광주시, 상생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임태호 조정·중재특위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GGM 현안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크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중재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명절 앞두고 분주한 방앗간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방앗간에서 설에 쓰일 가래떡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청년정책 집중…96개 사업 3346억 투입

청년정책조정위, 시행계획 심의·의결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5개 분야

광주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문화·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 3300여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3346억원을 들여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문화·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수당,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청년창업 특례 보증 등을 추진한다.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비해 구직활동 수당을 1개월 더 늘려 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경험드림사업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근무 기간을 기존 주 25시간 5개월과 신규 주 40시간 3개월로 나눠 운영한다.

주거 분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정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 문화 사업으로는 청년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34세까지인 K-패스보다 39세까지 교통비가 환급(30%)되는 ‘광주 G-패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청년정책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위원회·청년센터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광주시선관위, 2월17일까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기탁금의 20%인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농업박물관, 남도 전통 농경문화 가치 세계에 알린다

이색 전시·체험행사 등 추진
포럼서 민속놀이 활용 방안 논의

전남도농업박물관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남도 전통 농경 민속을 알리고, 전남 농경문화 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이색 전시와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전남 쌀 문화와 줄다리기 등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려 ‘글로벌 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의 ‘2025년 전시·체험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동아시아 쌀 특별전’을 개최해 전남 쌀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다. 특별전은 ‘농도’ 전남이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이지만 쌀 소비량이 급감하며 갈수록 위기에 내몰리는 쌀 산업과 쌀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지역을 넘어 쌀 문화권인 ‘동아시아 쌀 문화’를 함께 다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남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경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연중 농가월령에 따라 진행되는 농경 체험프로그램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화전 만들기, 모내기, 전통 벼 베기, 고구마 수확 등 다양한 농경문화와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선농제 재현과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등 대규모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남 전통 농경문화를 알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줄다리기 풍습을 재현하고, 의미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줄다리기가 행해진 지역으로 역사·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박물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2월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와 함께 전문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어린이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할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최근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모내기와 써레질(모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 등 농법을 그림으로 익히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연말 그림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도민과 함께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를 향유할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 박물관 전문성과 역량 기반 확대를 위해 학술포럼과 세계 특별전·대회 등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소상공인에 민생꾸러미 전달

영세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시·군 외식업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5만 원 상당 위생용품 5종 꾸러미 1만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비심리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전남도의 118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생용품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남지역 소규모 음식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1만 개소에 지원된다. 꾸러미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꼭 필요한 손님용 앞치마,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조리용 투명 마스크, 렌지후드 세정제, 뿌리는 곰팡이 제거제, 5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설 명절 전 배부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음식점 2만 개소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 원을 일시에 지원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외식업체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꾸러미 물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